

□ 특집 □

지역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강 근 복[†]

◆ 목 차 ◆

I. 서론	IV 지역정보화 정책실제의 기본전제
II. 지역정보화와 지역정보화 정책의 개념	V 지역정보화정책의 기본 구조 : 정책기조와 정책목표
III. 기존의 지역정보화정책에 대한 반성	VI. 결론

I. 서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채 열심히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우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 방향을 잘못 설정한 채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상황이 잘못 전개될 가능성은 오히려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정보화사회의 도래를 이야기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보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시작이 늦기는 하였지만 모두가 정보화, 지역정보화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도 꽤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지역정보화의 필요성과

지역정보화가 가져올 장미빛 성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방향감 없이 허둥지둥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전략들은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는가?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의 더 직접적인 목적은 지역정보정책의 새로운 방향의 정립, 지역정보화정책기조의 설정에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정보화정책의 재개념화를 토대로 지금까지의 지역정보화 추진전략을 반성하고 환경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지역정보화정책의 기조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지역정보화 추진상에 나타나고 있는 애로점이나 개별적인 문제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나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제외된다.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은 지역정보화 추진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큰 흐름과 관련된 것이고 이러한 흐름을

[†] 정희원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바로잡기 위한 방향의 설정에 있기 때문이다.

II. 지역정보화와 지역정보화정책의 개념

1. 지역정보화의 개념과 의의

지역정보화정책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화, 정보화사회, 지역정보화, 그리고 정보정책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란 이용자나 이용조직에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의미있고 가치있게 처리된 자료(이윤식, 1990:98)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보화란 정보의 가치가 증대되고 그 역할이 중요해지며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정보의 생산, 유통, 활용 등의 제반 활동이 원활해지도록 네트워크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소영진, 1996 : 162).¹⁾ 정보화사회(information society)란 ‘정보가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지배적(dominating)인 사회’로서 ‘정보가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사회적으로 큰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와 ‘정보가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한 핵심적 자원이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안문석, 1995 :

1)엄격한 의미에서 정보사회와 정보화사회의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즉, 정보사회는 정보의 가치가 증대되고 정보의 생산, 유통, 이용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를 의미하는 반면 정보화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보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사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하고 더 이상 정보화될 여지가 없는 정보사회는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정보사회와 정보화사회를 혼용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발전도상국과 발전국(선진국)을 나누어 이야기하지만 이때 발전도상국이나 선진국은 국가발전의 정도에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선진국이라는 것이 더 이상 발전의 여지가 없는 이상적인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531). 이러한 정보화사회의 중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화사회는 정보의 사회적 중요성이 증대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즉, 재화나 에너지 이상으로 정보의 가치와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된다. 그러나 정보의 집중화, 정보의 지역간 격차와 지불능력에 따른 사회계층간 격차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등장할 수 있다.

둘째, 정보화사회는 정보의 이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정보의 생산과 유통활동이 활성화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정보의 유통은 활용가능하고 정확한 정보의 생산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셋째, 정보화사회는 정보유통이 활발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의한 정보접근이 용이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정보전달수단의 고도화와 다양화라는 새로운 정보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정보유통의 양을 현저하게 증가시켰다. 이는 정보활동의 광역화와 동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보네트워크의 가능성을 제고시켰다.

넷째, 정보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정보가 권력의 핵심적인 요소로 지배의 도구화될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정보의 생산, 유통, 이용에 있어서 정당성 확보와 규제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이것은 산업사회에서는 찾아 볼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생활보호와 지적재산권보호라는 문제를 이 시대의 매우 중요한 문제들로 등장시켰다.

따라서 정보정책은 바로 이러한 정보화사회의 특성들과 관련되고, 이러한 중요한 특성들을 관리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보정책은 정보화사회의 근간이 되는 정보의 생산과 저장, 유통, 이용 등이 정당하고 효율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제도적인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관점은 다르지만 최근의 정보정책에 대한 논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96 참조).

한편 지역정보화에 대한 개념규정 역시 학자들간에 논의가 분분한데 지역정보화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개념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수성(1990)은 지역정보화를 '정보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써 국가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지역정보화는 '정보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써 국가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며, 지역차원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정보화를 추진한다는 '지역차원의 정보화'와 정보화를 통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낙후지역의 정보화'를 의미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역정보화는 국가차원의 정보화와는 달리 고도정보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정보화를 지방으로 확산시켜 정보접근성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요구에 맞는 통신시설의 정비 및 정보시스템의 도입을 통하여 국가의 지속적 발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꾀하는 지역차원의 정보화를 이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안문석(1995:642-643)은 지방(역)정보화를 3가지 다른 관점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첫째, 특정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그 지방에서 생산·유통·소비한다는 관점. 둘째, 특정 지방의 정보화를 제고한다는 관점. 셋째, 특정 지방의 정보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여 그 지방의 산업발달을 도모한다는 관점이다. 위의 관점중에서 첫째와 셋째 관점은 시장경제적 관점에 입각한 것이며, 둘째 관점은 기술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종합하여 지방(역)정보화는 특정 지방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지방의 정보생산 및 정보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그 지방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윤식(1995:809-811)은 지역정보화 또는 지방정보화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일차적으로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제 측면에서 지역 및 지방간 또는 중앙과 지방간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외국간의 격차도 해소함으로써 국가사회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할 목적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기반시설을 구축, 이용케 하는 정책적 제활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홍석(1995:239)은 지역정보화를 "중앙 혹은 지방정부의 정보정책 및 관리의 제약조건하에서 지역 주민, 기업, 단체, 지방정부 등 지방에 소재하는 사용자가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전자화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힘으로써 주민의 생활 편의의 향상,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적 과제의 해결 등과 같은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지역정보화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앙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지역정보화를 고도 정보화의 선행적 시책으로 지역간 균등한 정보접근성의 보장,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뉴미디어의 보급 촉진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생활의 질적 고양, 지방문화의 육성 등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주성(定住性)을 제고하고 지역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정보통신부, 1993).

지역정보화에 대한 논의도 많고 그 추진도 활발한 일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일본의 동경도는 지역정보화를 지역사회의 특성 및 주민의 생활의식, 요구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보통신 기반의 정비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풍요롭고 쾌적한 주민생활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지역정보화의 개념속에는 첫째,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입수가능하고 이용가능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수평적 네트워크의 형성, 셋째, 정보인프라의 정비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지역정보화의 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한국정보문화센터, 1993:32-33 서문).

위의 여러 개념규정은 대체로 지역정보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정보화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인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듯 하다. 다만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은 지역정보화가 국가 정보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일정 지역의 정보화,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른 정보화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역정보화를 지역수준에서 정보의 생산과 저장, 유통, 이용 등이 정당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제도적인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인적 자원의 여건조성에는 정보전문가의 양성, 주민들의 정보이용능력향상 등이 포함되고, 물적자원의 여건조성에는 정보통신기반을 비롯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이, 제도적인 여건조성에는 위의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와 정보의 생산, 유통, 이용 등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반 제도와 조직의 신설 또는 개편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정보화 정책의 개념

지역정보화정책은 앞서 논의한 정보화와 정보정책의 개념, 그리고 지역정보화의 개념에 비추어 지

역이라는 공간적 조건을 포함한 정보정책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하여 정보의 생산과 수집, 저장, 유통 그리고 이용 등이 정당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제도적인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원래 지역정보화정책은 인구의 도시집중, 지역간 불균형발전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추진되기 시작하였는데 지역정보화정책의 목적은 정보정책이 갖는 일반적 목적에 추가하여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쟁력의 향상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지역정보화정책의 주체는 중앙정부일수도 있고 지방정부일수도 있으나 지방정부의 정보정책은 곧 지역정보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는 지역정보정책은 지방화가 진전되면서 더욱 중요성이 강조된다. 올바른 의미의 지방화란 지역간의 경제적인 균형성장이 도모되고, 문화적 혜택이 지역적으로 골고루 보급되며, 지방의 특성이 제대로 구현됨과 동시에 전국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방화란 지방자치체가 실시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제반 활동이 지방이나 지역단위로 과거보다 더 활성화됨을 의미하고 이러한 지방화는 지역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정보화정책은 공공성이 높아 민간에서 사업화가 곤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포함하여 정보통신네트워크의 구축과 보급, 이용의 촉진을 의도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단위의 각 기관과 단체, 예를 들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관련 사업을 지원, 조정하고 민·관의 정보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둔 교육까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지역정보화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과제로는 정보통신기반의 정비, 관련 제도의 정비, 정보처리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그리고 활용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정보화 추진체계의 정비, 재정확보 등이 핵심적인 것이며, 결국 이것은 지역정보화정책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은 지역정보화정책을 이끄는 정책기조의 설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III. 기존의 지역정보화정책에 대한 반성

지역정보화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정보화정책에 대한 반성이 우선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지역정보화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분석보다는 두 가지 측면 즉, 지역정보화정책의 방향과 체계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이수성의 1994: 한국전산원, 1995: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기술경제연구부, 1995: 이종범, 1996 참조).

1. 지역정보화정책 방향의 불명확화

기존 지역정보화정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방향감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보의 개념규정이나 지역정보화정책의 의의, 목적 등에 있어 관련주체들 간에 분명한 합의가 결여되어 있고, 종합적인 지역정보화정책의 방향감이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지역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여 왔지만 명확하고 일정한 방향감 아래서 진행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과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이러한 노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부분적인 문제점은 남아 있다.

우선 정부는 정보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전기통신을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들로 그 범주를 제한하

고 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를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모든 종류이 자료 또는 지식을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으로 정의함으로써 정보의 범위를 ‘광 또는 전자식 방식으로 처리한 정보’들로 제한하고 있다. 다른 매체들에 비해서 전자적 매체가 정보처리능력면에서 일반적으로 월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매체들 통해 전달되는 정보들을 아예 정보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개념규정은 정보정책의 방향설정과 종합적 체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지역정보화정책의 방향 또는 목표의식도 관련주체들 사이에 명확히 공유되어 있지 못한 듯 하다. 지역정보화추진 관련 공무원들과의 면담결과에 따르면 지역정보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지역정보화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지,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정보화는 곧 전산화를 의미하고 자료처리의 전산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도 지역정보화의 의의와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정보화정책의 방향감 부족은 지역정보화를 통해 가져오게 될 정보화사회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관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초기 지역정보화사업을 주도한 사람들은 주로 공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보화의 기술적 가능성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었지 정보화의 사회경제적 효과, 특히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정책의 기초도 지역정보화의 ‘촉진’만을 강조하였지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나 이에 대한 대응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하였다(소영진, 1996:166).

또한 기존의 지역정보화정책이 이용자 중심이 아

나라 공급자중심으로 추진되었다는 것도 지역정보화정책의 방향과 관련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무엇을 위한 정보화인가? 그것은 당연히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향상에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지역정보화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그 방향이 선회되어야 마땅하다.

2. 지역정보화정책의 종합적 체계화의 미흡

정책의 방향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정책의 종합적 체계화가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 우리의 지역정보화정책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우리의 지역정보화정책의 추진이 개별적 정보화사업의 필요성과 투자의 우선순위, 비용과 효과에 대한 고려, 타 부문 정책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없이 선진국 특히 일본의 경험과 전략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여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결정도 단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고 지역정보화 추진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환류도 매우 불만족스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정보화정책의 추진은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협력체계의 구축, 그리고 관계 정부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의 구축 여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와 민간부문 사이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에 있고 정부부처간의 갈등 해결과 협력체계의 구축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도 지역정보화사업이 모든 부서에 관련된 것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지금은 업무의 성격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정보통계담당관실 등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음)와 다른 부서들이 지역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적절한 역

할분담과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기에 따라 지역정보화정책의 종합성이나 체계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부서들 사이의 협조체계도 문제이지만 중앙정부의 지역정보화정책과 지방정부의 지역정보화정책과의 연계성확보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밖에 표준화의 문제, 데이터베이스의 중복개발문제(데이터베이스의 중복개발실태에 대해서는 김영삼, 1994:197 참조), 네트워크의 효과성 증대 문제 등도 모두 지역정보화정책의 방향 또는 종합화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다.

이제까지의 하드웨어중심의 정보화도 지역정보정책이 종합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잘 나타내 준다. 컴퓨터를 많이 준비하고 물리적인 통신시설기반을 확충하는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이에만 치중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활용, 정보전문가 양성과 이용자들의 정보능력향상, 정보문화육성, 그리고 정보화에 따르는 관련 제도의 개혁 등을 포괄하는 지역정보정책의 종합적 체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IV. 지역정보화 정책설계의 기본방향

지역정보화정책을 설계하고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여야만 지역정보화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적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고려 요인

1) 정보의 특성과 중요성에 대한 바른 이해

지역정보화정책의 기본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일반적으로 정보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는게 필요하다. 정보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이제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에 속한다.(이윤식, 1989: 101-105). 그러나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상식적인 정보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재인식이 지역정보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는데 매우 중요하다.

정보가 보다 활발히 유통되고 더욱 많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나 조직이 정보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인정하는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려 하다가 낭비와 비능률이 초래되고 정보에 관련된 정책들 사이에 어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계도 형성되기 어렵게 된다(Doty and Erdelez, 1989:82)

2) 지역정보화정책 환경에 대한 분석과 이해

지역정보화 정책체계의 설계를 위해서는 지역정보화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을 제대로 파악하는게 필요하다. 지역정보화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지역과 관련있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 지역정보화 정책 연구의 성과,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과 지방정부의 재정상태, 관련 조직의 자원, 기술유통, 교육 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의 우선 순위와 강도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정보의 유통을 위한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전수준, 정책결정자의 자질과 심리적 인지적 성향, 지역정보화정책과 관련된 집단들(정보의 생산자, 판매자 또는 분배자, 구매자 또는 이용자, 정보유통의 규제기관 등), 정보 이용자의 정보요구, 정보수집의 행태와 정보능력, 지역정보화정책과 관련이 있는 법적, 제도적 조건과 정치적 요인 등이 역시 지역정보화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것은 물론 앞으로 만들어질 지역정보화정책도 당연히 지역정보화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밖에 외국의 지역정보화정책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외국에서 추진중에 있는 지역정보화정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정책대안의 선택적 도입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 그러므로 지역정보화정책 체제의 설계시에 이러한 요인들을 충실히 고려하지 못하면 신출된 지역정보화정책이 좋은 정책이기 어렵고 또한 집행의 성과도 크게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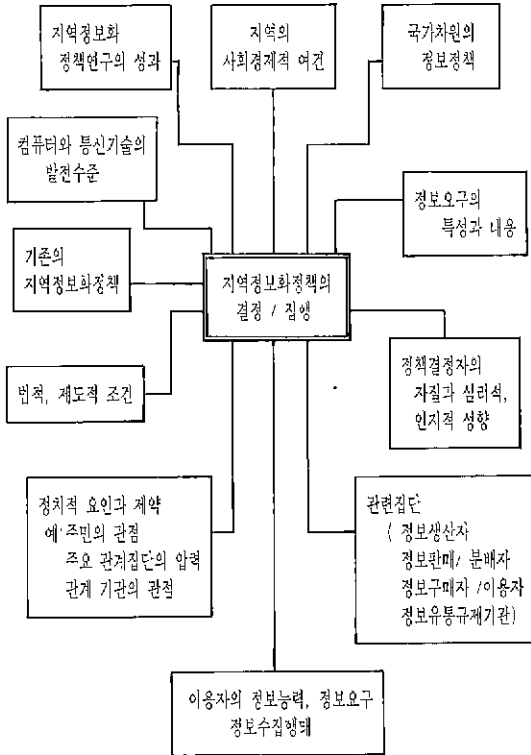
3) 지역정보수요의 내용과 특성의 분석

정보의 공급측면을 강조하는 접근법에 따르면 질이 높고 충분한 양의 정보가 산출되기만 하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조직(예를 들면 기업)이 그러한 정보를 찾아내어 쇠신과 경쟁력 향상 등에 활용하게 된다고 한다(Shapley and Roy, 1985). 그리고 정보의 생산자와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보의 유통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보가 쇠신과 경쟁력향상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생각들은 잘못된 것이다. 정보가 생산되기만 하면 당연히 필요로하는 사람에게 유통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유통과정도 단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유통에는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기 마련인 것이다.

지역정보화정책은 정보의 생산, 유통, 이용과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생산된 정보가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되지 못하고 정보의 생산자와 이용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보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지역정보화정책의 형성은 정보가 생산되어 궁극

<그림 1> 지역정보화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료: Bisop and Fellows, 1989 50의 내용을 수정한 것임

적으로 활용되기까지의 단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는 대개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를 거쳐 생산된 활용에 까지 이르게 된다. ①(잠재적)이용자가 정보가 있음을 알게 된다. ②이용자가 그러한 정보의 가치를 알고 관심을 가진다. ③이용자가 그 정보를 획득한다. ④이용자가 그 정보의 가치를 평가한다. ⑤이용자가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그 정보를 이용한다.

4) 정보의 표현 형태 또는 매체의 고려

정보는 여러 가지 매체에 의존하여 여러 형태로 표현된다. 지역지역정보정책의 설계는 특정한 정보가 나타나는 형태또는 의존하는 매체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구조화되어야 한다.

5. 정보유통을 제약하는 요인의 분석

가능한 한 생산된 정보는 널리 유통되어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안보나 개인의 사적비밀 보호를 이유로 또는 정보의 생산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정보를 지적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정보의 유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정보의 생산에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소요된다. 만일 정보를 생산한 사람이나 조직이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다시는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려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정보의 생산을 촉진하고 재화로서의 정보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정보를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하는게 필요하다. 그러나 정보는 공공재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생산자의 지적 재산권보호 문제는 정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다루어질 것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지역정보화정책 체제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정보의 유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가 유통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 정보요구자가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지역정보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도 당연히 지역정보화정책체제의 설계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작업임에 틀림없다.

V. 지역정보화정책의 기본 구조 : 정책기조

와 정책 목표

지역정보화 정책체제의 기본 구조 중에서 여기에서는 정책기조와 정책목표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왜냐하면 정책기조와 정책목표야 말로 지역정보화 정책체제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정보화 정책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기 때문이다.

1. 지역정보화 정책기조의 구성

1) 정책기조의 의의

정책기조란 정책의 방향, 내용, 성격, 과정 등을 규정해 주는 기본적 준거가치, 사고정향, 이념, 철학, 사상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현실의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 그 방향, 내용, 과정 등 정책의 모든 측면을 규정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인식의 틀 역할을 함으로써, 정책에 관한 한 근원적인 유전자라고 할 수 있다(허범, 1989:89). 이렇게 보면 지역정보정책의 기조란 지역정보정책의 방향, 내용, 성격, 과정 등을 규정해주는 기본적 준거가치, 사고정향, 이념, 철학,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정보정책 체제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우선 지역정보정책의 기조를 구성하는게 매우 중요하다. 지역정보정책의 기조가 구성되어야 이를 토대로 정책목표가 설정되고 또한 대안의 탐색과 선택의 범주, 기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역정보정책도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인식과 사고작용의 산물이다. 지역정보정책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 여하에 따라 지역정보정책의 내용과 성격은 달라진다. 즉, 정책관련자들의 인식의 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정책관련자들이 지역정보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실제의 정책 내용과 성격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지역정보정책의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모든 관련자나 집단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책기조를 주장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바람직하고 타당하며 적실한 지역정보정책의 기조는 이러한 지역정보정책관련자들이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토론을 통하여 이를 도출하고 정책의 형성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가능하면 정책관련자들이 정책기조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공개적인 논의가 합리적이면서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바람직스럽다.

한편, 현실의 구체적인 지역정보정책이 상하의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는 바와 같이, 그러한 지역정보정책을 규정하는 정책기조도 고도의 추상적·관념적 성격을 갖는 것과 상대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성격을 갖는 것 등의 계층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논리의 세계에서 가치의 위계구조가 있는 것이나, 목표수단의 연쇄체계가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때로는 정책기조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그것을 정책기조라고 부르기가 마땅치 않을 경우도 있고 정책목표나 정책방향 등과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책의 계층구조적 구분이 상대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상위와 하위의 정책기조를 구분하는 것도 상대적인 데서 나타난 현상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때로는 정책방향 또는 정책목표 등과 구분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상대적인 목표수단의 논리구조 속에서 더 직접적이고 특정적이며 단기적인 것들은 경우에 따라 각각 정책방향, 정책목표라고 부를 수 있고, 좀 더 궁극적이고 일반적이며 장기적인 기본가치, 사고정향, 철학, 사상, 이념을 구성하는 것은 정책기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박정택 외, 1993:63-97).

따라서 지역정보화 정책기조는 지역정보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대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개괄적 기준을 제공한다. 동시에 정책집행에 방향감을 부여하고 정책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판단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집행과정에서 기본정책의 취지, 방향, 성격 등을 이탈한 정책표류(policy drift)를 사전적으로 방지한다. 설혹 정책이 표류된다 하더라도 정책기조가 명확하면 이에 입각한 정책의 수정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2) 지역정보화 정책기조의 구성

정책과정에서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기조는 그것이 갖는 속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책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첫째, 정책기조는 특정의 이념·철학·가치를 선호하고 다른 것들은 거부함으로써 서로 다른 정책기조를 주장하는 사람 또는 집단 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정책관련자나 집단이 지역정보정책에 대하여 특정한 정책기조를 갖고 있다면 그들은 정책과정의 전 과정에 걸쳐 자신이 선별한 특정 이념, 철학 또는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므로, 불가피하게 기조를 달리하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하여 폐쇄적이기 쉽고, 이로 인하여 대립·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정책기조는 지역정보정책의 결정과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는 반면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집행의 경직화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공개적인 공공의 논의과정을 거쳐 지역정보정책이 추후에 가야 할 정책기조가 뚜렷이 부각되고 그것을 정책당국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채택하면, 그 특정 정책기조의 유지는 이후 전 정책과정에 걸쳐서 일관성있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게 해 준다.

한편으로 지역정보정책은 변화하는 여건에 맞

어서 상황적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정 정책기조에 너무 독선적·배타적으로 매달린 결과, 그에 토대를 둔 정책을 너무 경직적으로 집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결국 필요 이상으로 특정 정책기조에 집착하면 오히려 지역정보정책의 경직성을 조장하고 정책효과의 산출에 제약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기조가 부여하는 방향성과 지역정보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지역정보화 정책기조의 편성이 중요하다. 즉 지역정보화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하지만 다음과 같은 철학을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지역정보화정책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무엇을 위해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목표인식에 대한 성찰을 일차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정보화가 행정과제의 수행과 행정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정보화의 성공적인 구축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측면에서 정보화사회가 부여하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할 때 지역정보화는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선결과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지역정보화가 수단임을 강조하는 것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궁극적 이유에 대한 인식은 지역정보화정책이 지역사회 각 분야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과 연결되어야 한다. 정보화를 통해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사

회 각 부문이 균형있게 발전되도록 하여야 함과 동시에 지역특성과 지역적 필요를 고려한 지역정보화 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의 산업구조, 정보수요 등 지역특성과 지역적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 지역정보화정책의 추진은 인간다운 사회의 건설이라는 궁극적 이유와 상치되는 것이며, 방향성없는 정책수단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정보화가 효과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지역문제의 해결을 통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낙관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많은 학자들이 정보화가 가져오게 될 역기능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정보화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낙관적 관점과 함께 비판적 관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역정보화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인간에게 불리한 영향을 야기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정보교류는 민주사회의 핵심적 요소라는 점과 아울러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역시 민주정부하에서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에 대한 강조는 지역정보화정책의 중요한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을 특별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정보화 정책설계의 기본방향

지역정보화정책설계의 기본전제와 정책기조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지역정보화정책(설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합리적 분업화

지역정보화정책의 체계를 설계하는데는 우선 정

보를 수집, 가공하고 유통하는 활동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사이에 어떻게 분업화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게 필요하다.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실패, 또는 시장의 불공평성 등의 이유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정보의 관리활동을 주도하는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시장의 실패가 있듯이 정부의 실패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것이 정부가 나서서 것 보다 정보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을 생각해 볼 수 있다(정부의 실패와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최병선, 1992 참조).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정부도 불완전하고 시장도 불완전하다. 정부의 주도적 개입이라는 대안과 민간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대안 중 어느 것도 정보의 유통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완벽한 대안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상황적 여건을 고려하여 이 양자를 어떻게 조합하는 것(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 분담)이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보다 활발하게 하는 방법인지를 비교하고 평가하여 지역정보화정책 체계를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

2) 지역정보화정책의 종합성과 체계성의 확보

지역정보화정책의 범주안에 포함되는 개별 정책들은 가급적 종합적인 안목에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국가정보화계획과의 연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가차원에서의 계획과 유리된 지역차원의 정보화계획은 자칫 중복투자 뿐만 아니라 기능상의 호환성에서 비능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보와 관련된 개별적인 정책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연관성을 완전하게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지역정보화정책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나, 개별 정책들 사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어쩌면 완벽한 의미에서의 종합화나 일관성의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별 정책들 사이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개별 정책들이 전체로서의 지역정보화정책 체제내에서 통합되지 못하면 지역정보화정책의 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가 없다. 그런데 개별적인 지역정보화정책들 사이의 연계성 확보와 일관성의 유지가 권위주의적이거나 중앙집권적인 정책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이는 관련자와 관련기관들 사이의 활발한 토론을 조장하고 제도적 정책조정기관의 활성화를 통해서 추진되는게 현실적이고 바람직스럽다(최병선, 1993).

종합성과 체계성을 확보한 지역정보화정책의 형성 또는 정보체제의 설계와 관련하여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가외성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Landau, 1969: 346-358).

흔히 정보 수집의 효율화를 위해 국내외 정보의 수집과 관리는 하나의 기관 또는 몇 개의 기관이 명확한 영역분할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하고, 지역정보화정책의 담당기관도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하는게 좋다는 주장이 많다. 정보활동과 관련된 기능의 중첩이나 중복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전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외성(redundancy)이 정보 수집과 관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일상적으로 가외성은 여분의 것. 없어도 되는 초과분의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므로 없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능률성과 경제성은 가외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영(zero)의 상태에 도달해야만 확보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신뢰할 만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복수의 정보채널이 필요하고 정책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복수의 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정보화정책의 결정과 집

행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러울 수가 있다. 다만 중첩되고 중복된 기능과 기구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노력을 별개로 추진할 필요는 있다. 그러므로 정보의 수집, 관리, 유통을 위한 제도와 기구를 설계함에 있어서 정보 관리의 능률과 정보의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가외성을 어느 영역에서 어떤 형태로 얼마큼 인정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게 바람직스럽다.

3) 이용자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와 필요, 여건 등을 반영하여 정보화가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보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은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 소득, 거리, 기타 제반 여건과 무관하게 누구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편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편적 정보이용기반을 구축하는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독점금지, 정보소유와 이용의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것처럼 정보접근에 대한 부당한 제약과 차별을 없애고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정보의 공동활용과 네트워크 효율성의 중시

원칙적으로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는 한 번만 수집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한 번의 수집으로 해당 정보에 대한 모든 수집절차를 종결시킬 수는 없다. 이것은 단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지역사회 전 부문에서 정보공유를 확대함으로써 정보의 개별적 생산, 처리, 유통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낭비와 정보관리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편의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에 바탕을 둔 것이다.

모든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지역정보화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산업별, 기관별 등 지역내 네트워크의 구축과 네트워크의 네트워크화, 국내의 네트워크와의 상호접속과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종합적 관리 및 운영, 표준화 등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동시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 상호간 연계 및 국가정보화정책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은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고 국가수준의 각 부문 또는 다른 지역에서 형성되는 정보망과의 상호연계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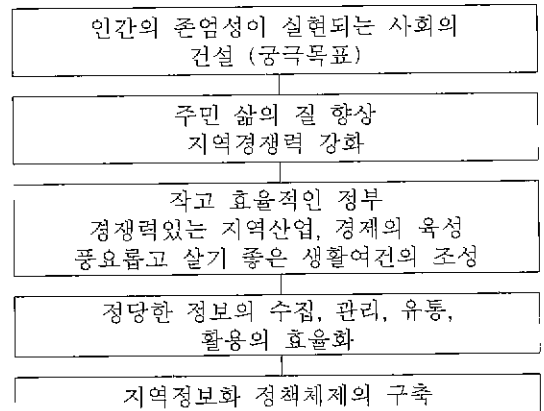
그 밖에 지역주체의 정보생산을 활성화하고 정보자원의 호환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표준화를 추진하며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 확보 등과 관련된 과제들도 종합적으로 정책설계의 기본방향에 포함되어야 됨은 물론이나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논의를 생략한다.

2. 지역정보화 정책목표의 체계

개별적인 지역정보화정책의 목표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지역정보화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갖추는게 바람직스럽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지역정보화정책의 목표 역시 이러한 목표체계를 염두에 두고 구조화되는게 바람직스럽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개별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할 때도 목표와 수단의 체계적인 연관관계를 항상 염두에 두는게 필요함은 물론이다.

지역정보화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유형의 정책목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이 보다 충실하게 실현되는 사회의 건설'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정보화정책의 목표는 주민 삶의 질의 향상과 지역 경쟁력의 강화에 두어져야 한다. 이러한 목표는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 경쟁력있는 지역산업과 경제의 육성, 풍요롭고 살기 좋은 생활여건의 조성이라는 목표(일반목표)로 체계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목표는 정보의 수집, 관리, 유통, 활용의 효율화(부분목표)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는 바람직한 지역정보정책체제의 구축과 행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그림 2참조). 물론 바람직한 지역정보정책체제의 구축은 어떤 방법을 통하여 가능할 것인가 라는 또 다른 하위의 목표 또는 수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여기에서는 논의를 생략한다.

< 그림 2 > 지역정보화정책의 목표체계



VI. 결론

이 연구는 지역정보화정책의 기본방향을 재구성해 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여 지역정보화, 지역정보

화정책의 개념을 정리해 보고 기존의 지역정보화정책의 문제점 중 중요한 것이 정책의 방향감 또는 기조가 명확하지 않고 종합적 체계화가 되지 못한 것임을 밝혀 내고 이 두가지도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것임을 밝혀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지역정보화정책의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았는데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제시는 이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지역정보화정책의 구체적인 설계내용과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변화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과제로 남겨져 있다. 물론 정책기조나 목표도 일단 설정되기만 하면 고정불변의 상태로 남아 있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변화에 따라서 정책기조나 목표가 어떻게 변화되어가는지를 상시 추적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 역시 앞으로의 연구과제임에 틀림없다.

참 고 문 헌

김영삼. (1994). 지방정부의 지역정보정책.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관악행정학회.

박정택 외. (1993). 정책학. 미간행.

소영진. (1996). 행정분야의 정보화. 초고속국가망 응용서비스 종합시연 및 국제세미나. 초고속정보통신기획단/한국전산원.

안문석. (1995). 정보체계론(제3판). 서울:학현사.

이수성. (1990). 지역정보화와 지역정보센터. 통신정책동향. 제5권 2호.

이수성·방석호·황주성. (1994). 지역정보화 촉진제도. 통신개발연구원.

이윤식. (1990). 행정정보체계론(상). 서울:법영사.

이종범. (1996). 정보화사회의 성숙을 위한 정책과제와 전략. 정보통신학술연구과제.

최병선. (1992). 정부규제론. 서울:법문사.

최병선. (1993). 제도개혁과 민주적 정책조정의 역

설. 한국정책학회보. 제2호.

최홍석. (1995). 지역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구성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4권 제2호. 한국정책학회:233-257.

한국전산원. (1995). 국가사회정보화 종합발전방안. 한국전산원.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96). 세계화시대의 종합적 정보정책연구(1).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기술경제연구부 편. (1995). 초고속정보통신기반환경하의 지역정보정보화정책-일본 지역정보화 정책의 성과와 전개방향.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정보문화센터. (1993). 일본동경도의 지역정보화계획.

허벌. (1988).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편. 행정학개론. 서울:대영문화사.

Bishop, Ann and Fellows, Maureen O'Neill. (1989). "Descriptive Analysis of Technical Information Policy Studies," in McClure, Charles R. and Herson Peter ed. *U.S.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Policies: Views and Perspectives*.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

Doty, Philip and Edelez, Sanda. (1989). "Overview and Analysis of Selected Federal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Policy Instrument, 1945-1987," in McClure, Charles R. and Herson Peter ed. *U.S.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Policies: Views and Perspectives*.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

Landu, Martin. (1969). Redundancy, Rationality, and the Problem of Duplication and Overlap. *PAR*. Vol.29.

Shapley, Deborah and Rustem Roy. (1985).

Lost at the Frontier: U.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drift. Philadelphia, Penn.: ISI Press.



강근복

1981 현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1992-1993 미국 시리큐즈 대학교 기술 및 정보정책연구소 객원교수
1994-1996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지방공무원 교육원(대전, 충남)강사
한국행정학회 총무, 연구, 편집위원.

이사, 교육취업위원장
한국정책학회 운영위원, 감사
충청지역 정보화추진협의회 운영위원, 행정고등고시위원

- 저서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1994.
정책분석과 문제정의.(역서) 대광문화사. 1990.

1996년 국제 컨퍼런스

한국정보처리학회에서는 우리나라 정보산업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필수불가결한 "21세기 정보기술"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다 음 —

- 주 제 :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21세기 정보기술
Industrial Survival Strategy for next Generation S/W Technology
- 일 시 : 1996. 6. 12 ~ 13 (2일간)
- 장 소 : 롯데호텔 (잠실)
- 내 용 : - Next Generation Software
- Internet/intranet and business
- Object Oriented Technology
- Data Warehousing
- CALS/EC